

■ 유기농업자재 광고.표시가이드라인 시안 협의회

◎지난 10월20일 농식품부 주관 관계부처 회의개최 시안 논의

-참석자 :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주관), 농관원, 농과원, 자율광고심의기구, 실용화재단 등 3개공시기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친농(안인 박사)

◎유기농 허용물질 광고와 제품광고를 분리=법령을 개정않고 현행규정 내에서 시안작성▶한친농 반대▶농관원과 한친농 추후협의 추가개선안 마련

◎ 유기농업자재 광고.표시 가이드라인 시안(농관원안)

① 광고 표시 가능한 경우

□ 유기농업자재 원료인 허용물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특성을 광고하는 경우로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한 출처를 밝히는 경우

○ 공공기관 연구보고서, 논문(SCI급), 특허등록 등에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명확한 경우로 반드시 해당 출처를 명시하되 해당제품의 원료(허용물질) 함량(%)을 표시
※ 문헌 인용시 문헌명, 집필자(연구자) 성명, 발표 연월일 등 세부적인 근거 명시
(예시) 유기농업자재 00제품의 원료인 00허용물질은 00(논문번호, 특허등록번호, 공공기관 00연구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00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00제품의 0%를 차지하고 있다. 00(문헌명)은 000가 연구한 것으로 00.0.0.에 작성된 것이다.

□ 공시제품에 대해 광고할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표시하되 타 법령에 따라 공인된 시험성적서 또는 등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①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농관원고시) 제7조(검사 및 시험성적서 등의 인정범위) 제1항에서 정한 시험.검사성적서를 근거로 하되 광고의 경우 대상 공시제품으로 시험.검사한 것일 것

② 타 법령에 따라 지정.인증된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한 성적서와 타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된 사실을 근거로 하되 광고 대상인 유기농업자재로 시험.검사한 것일 것
※ 문헌 인용시 문헌명, 집필자(연구자) 성명, 작성(발표) 연월일 명시

(예시) 유기농업자재 00제품은 00(00시험기관, 특허등록번호 등)에 근거하여 00의 특성이 있다. 00(문헌명)은 000가 연구한 것으로 00.0.0.에 작성된 것이다.

□ 광고시 표시 활자 크기는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업자가 자율적 결정

② **광고 표시 불가능한 경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시제품(효능·효과 미표시)이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제품(농약, 비료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범위**

- 제품명칭 및 효과에 농약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 세포분열, 생장, 성장 등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문구
- 과실비대, 뿌리비대, 구근비대, 비대 등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문구
- 착과, 수정, 화아형성, 화아분화 등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문구
- 발근, 발아, 출아 등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문구
- 착색, 색발현 등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문구
- 숙기촉진, 숙기 앞당김, 조기수확 등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문구
- 당도증진, 풍미향상, 식미개선, 산미감소, 품질향상 등에 오인하기 쉬운 문구
- 도복경감, 도장억제, 옷자람 방지 등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문구
- 기타 오인하기 쉬운 문구 : 생장조정물질 등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유기농업자재 공시정보 등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관련 근거없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유기농업자재와 관련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 광고하는 것
-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 **농관원이 다시 시안을 보완 한친농과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확정 시행키로 하고 향후 광고 개개 문구에 대해 “한친농 자율심의방안” 을 마련키로 함**

※ **한친농의 “작물군별 표시제” 주장에 대해 추후 규칙개정을 추진 개선키로 함**

● **농관원, 유기농업자재 시료발취 등 유통검사 실시중**

- 지난주부터 농관원 정기 시료발취 시작 법규위반 상황과 함께 단속중이나 일부 농관원 단속공무원 유박 GMO 요구 등 무리한 자료요구 ▶ 통일된 단속 지침 마련필요(10/20 관계기관 회의시 시정건의)

◎비료공정규격 개정

○비의도적 혼입 농약성분 허용기준 : MRL 최대치로, 리신10mg/kg이하 설정

- ▶지난달 18일 농진청은 비료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허용 기준을 농산물에 적용하는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의 최대치로 정하는 등 비료 공정규격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농약에 오염된 원료는 비료 원료로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가축 사육 및 농산물 재배과정에서 사용된 농약이 퇴비의 원료로 쓰이는 가축분이나 똥짚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료에 혼입되는 실정이라서 비료 생산업체가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비료의 농약성분 허용기준을 농작물이나 인축에 해를 주지 않는 수준인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동 기준에 없는 농약성분은 불허용)로 설정했다. 현장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걸로 본다
- ▶ 또한, 아주까리 유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도 유럽의 사료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리신함량을 10mg/kg이하로 설정했다. 비료의 포장지 앞면에도 적색 네모 박스 안에 적색글씨로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다' 라는 주의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분석법, 분석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실정임. 일단 선언적 의미로 보고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임.

◎2018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사업 시행지침 개정

▶한친농 일반농 포함 건의 ▶전년예산과 동일 지원불가 ▶추후예산확보 지원

- **사업 현황**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등의 경영비 절감, 지력증진, 농약.화학 비료 사용감소를 통한 농업환경 개선 및 공시자재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추진('13~)
* 예산 : ('13) 50억원 → ('14) 30 → ('15) 34 → ('16) 32 → ('17) 31 → ('18) 31
* 녹비종자, 토양개량.작물생육.병해충관리용 공시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를 사용 신청 받아 지원(50% 자부담)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 **추진 배경** : 그간의 사업성과 및 집행현황을 점검하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개편 필요 * 사업 모니터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 지자체에서 건의된 의견을 기초로 사업시행지침 개정

○**주요 개선내용** (사업자선정) 농가단위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방식을 신청농지 단위로 조정

현 행	개 선
○ 우선 순위 적용 - 유기인증 > 무농약인증 > 일반농업인	○ 신청농지 단위로 우선 순위를 적용 - 유기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농가 제외) 과거 예산 불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유기농업자재의 사업대상자

를 일반농업인까지 확대하였으나, '17년도 사업 수요가 늘어나 지원이 어려움

현 행	개 선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등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등

* 전북, 경북, 경남도에서 사업 목적 등을 고려 관행농가는 지원 제외 요청

▶한친농 2017-14 포함 건의 ▶전년예산과 동일 지원불가▶추후예산확보지원

○ (지원필지) 사업 지원이 가능한 대상 재배농지를 구체적으로 명시
지원대상 농지는 경영체등록 농지에 한정하여 지원

- (예외) 친환경농산물인증 중이나 임야 등으로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 및 인삼경작예정지 확인서 첨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지원대상제외

* 예외를 제외한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사업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신청기간 중에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신청기간) 사업구조의 개편, 유사 정부사업 신청기간의 차이로 인한 지자체 업무부담 완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 위해 신청기간 변경

현 행	개 선
○ 당해연도 1~2월	○ 전년도 11~12월

○ (지원대상자) 사업기간(사업신청부터 자재구입 사용시기까지) 중에 인증이 유효한 건에 한해 보조금 지원 * 세금계산서, 자재구입 영수증, 영농일지 등을 근거로 자재 사용시기 확인 - 사업신청 접수, 보조금 지원 전에 사업대상자의 인증 유효여부 확인(친환경 인증정보 관리시스템, www.enviagro.go.kr)

○ (지원제한) 당해 연도 녹비작물 종자 신청농지는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와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 원료 병행 신청 제한

○ (AgriX 입력 철저) e-나라도움 도입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집행정보 등을 AgriX 시스템에 입력('17.11.30.까지)

○ **향후 계획** : 개정 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 등 '18년도 사업 시행

- 지자체의 사업공모(11~12월) 및 사업 지원대상자 확정(1월) * 사업신청접수 시기 변경에 대한 농업인등 대상 홍보 철저

* '17년도 하반기 부정수급 사례 일제조사(~'17.12월) : 덤핑, 농가 자부담의 공급업체 전가 등 부정수급 점검 통해 보조금 누수 차단 *지자체 점검결과 (~'17.11.),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등 조치

[2017 국감소식]

[농식품부] "한미FTA서 쌀등 농산물 양보 절대 안돼, 형편없는 농업예산 질타



[해양수산부] "항생제 등 잔류약품 검사 강화하라"

[식약처] 살충제 계란·생리대 위해성 '집중 질타'

[산림청] "산불 진화용 대형헬기 확보" 목재펠릿 위해성

[농촌진흥청] "불법·밀수농약 근절방안 " 불합격비료 증가 품질관리 강화하라 "

[농협중앙회]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영업 이익률 19.3%...농민 상대 돈벌이하나"

[유통공사] 가락시장총각무 하차경매 도마 [농어촌공사] 저수지 수질·안전관리 문제

* 그외 사항은 2017년도와 동일

- ◎ 농식품부 국정감사 주요 내용 : 정부 쥐꼬리 예산편성 지적, 한·미 FTA 협상 놓고 여야 실전 ” 달걀파동 국민 불안감 높여 친환경방제 시스템 구축해야, 김영란법 개정 목소리 고조, 직불금관리 '부실' 부당수령건 확인에도 회수미흡 지적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2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농업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만큼 높이라는 요구가 거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의 지적에 김영록 장관은 “개정협상에 대비해 품목별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 ◆ 농업예산=정부의 농업예산 홀대 문제는 올해도 빠지지 않았다. 정부가 편성한 2018년도 전체 부처예산은 올해보다 7.1% 늘었지만,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0.04% 증액에 그쳤다. 황주홍 의원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사실상 줄어든 것” “한국농정이 암흑기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 ◆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동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졌다며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군현 의원은 “이번 달걀 파동의 근본원인은 일부 농가에서 닭진드기를 없애려고 허가받지 않은 농약을 살포 했다는 데 있다”며 “산란계농장에 대한 무허가 농약 사용 단속을 강화하고, 검증된 친환경방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해 김장관은 “친환경 인증제도를 개편, 동물복지형으로 전환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외래 붉은불개미의 유입 사태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완영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가액을 10만원으로 올려도 한우 선물세트 하나를 못 만든다”고 지적했다. “농축산물은 허용 가액을 인상할 게 아니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농진청 국감] 16일 농촌진흥청·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산투입 대비 성과문제와 농약 관리실태가 집중 거론됐다.



◆**종자개발 실적 미흡**=골든시드프로젝트(GSP)가 양파 종자분야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보통비료 18.4% 품질기준 미달... 황주홍 의원 "품질관리 강화 시급"**

농촌진흥청이 매년 실시하는 비료품질검사결과, 보통비료의 평균 18.4%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등 미달비율이 높아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황주홍의원은 비료의 품질기준 미달은 2014년 811건 검사중 76건, 15년에는 826건검사 중 66건, 16년은 895건검사중 7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진청이 모리브덴, 붕소 등 미량원소 검사를 강화한 왜곡된 결과이다.

◆ **PLS등 농약관리 곳곳에 허점**=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 2019년 전면 도입되면 부적합 농산물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PLS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1kg당 일률적으로 0.01mg 이하, 사실상 불검출 수준으로 규제한다. 박완주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PLS 적용 전후의 농산물 부적합률 변화 추이'에 따르면 이 제도가 우선 시행된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의 부적합률은 도입 전인 2016년 2.1%에서 도입 후인 2017년 상반기 10.8%로 5배나 뛰었다."며 PLS 제도의 전면시행에 대비한 사전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식의역차와 농진청 등 부처간 엇박자문제도 제기됐다.

[산림청 국감] '2017년 재선충병 박멸' 정부 대책 문제점 집중 질타...산림정책 10년째 제자리 걸음...

국산 산양삼 상자 봉인 '허술' 중국산과 바꿔치기 수법 활개 임산물 관리대책 강력 촉구, 수입 배지로 생산한 표고버섯 국내산으로 버젓이 유통, 산림청이 2016년 전국 12개 성형목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한 결과 6개 업체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 "고가의 참숯 대용품으로 사용되는 성형목탄이 부실 관리감독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단속확대 요구



[농협중앙회]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영업이익률 19.3%... 농민상대 돈벌이하나"



-타보험 영업이익률은 1%대, 보상액은 산재보험 1/10 불과, 김영란법 조속개정및 농업부문 조세감면 연장건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의무화도 건의

농협은 20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기재부 국감 정부 '고향세도입' 검토하고 있다..모과장 또라이 발언 사과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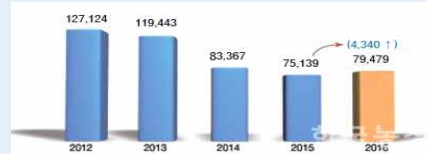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과로 시작했다. "모보좌관이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관련자료를 요청하자 담당 과장이 '또라이'라며 욕설을 했다"는 건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0일 "고향세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도 많지만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분권을 위해 고향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이같이 답변했다. "고향세는 일본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과도한 경쟁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친환경농산물 관련 지표 반등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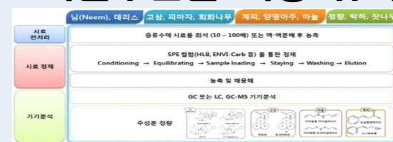
○농경연, 친환경농산물 시장현황 발표...

친환경 과실류 출하량 2배 증가



2012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및 인증면적, 시장규모 등의 통계가 2016년 일정수준 반등했다. 농경연이 13일 발표한 <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감소하던 친환경농산물(유기농·무농약) 인증실적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년 대비 약 5.8%가 증가한 7만9,500ha였으며, 농산물 출하량은 전년 대비 24.2% 증가한 57만1,200톤에 달했다.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1조4,665억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유기농 인증 농가 수는 2000년 이래 연평균 약 25.2% 증가했으며,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연평균 30%씩 늘어났다. 반면 무농약 농산물 인증면적과 인증농가 수는 2012년 이래 지난해까지 계속 감소했다. 특기할 점은 지난해 과실류의 출하량 증가율이 전년 대비 2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각 지역 학교급식에 친환경 과일 공급이 늘어난 점과 연관이 있는 걸로 보인다.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를 1조4,665억으로, 향후 시장규모가 연평균 5.9%씩 성장해 2020년엔 2조1,034억으로 전망했다

●식물추출물 이용 유기농업자재 주성분 설정 및 분석법 개발



○농진청은 유기농업자재 원료로 사용되는 50여종의 식물추출물에 대한 분석법을 제시했다. 주성분이 설정된 식물추출물은 님, 고삼, 계피, 마늘, 데리스, 회화나무, 피마자, 양명아주, 정향, 박하, 잣나무 등 11개, 29성분의 정량분석법이다.

●붉은독개미!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

-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CY)에서 “붉은독개미” 발견 -



이번에 발견된 독개미는 Red imported fire ant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세계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 속하는 종으로, 몸 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어 날카로운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의 과민성 쇼크 증상도 유발한다. 다행히 더 이상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 GAP 농산물 미등록농약 검출율... 일반농산물보다 5배나 초과검출



○3313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2% 이상... 농협 식품연구원 3년간 조사한 결과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농산물의 2% 이상에서 사용해선 안되는 미등록농약이 검출됐다. 농협식품연구원 김준성 연구팀이 2014년~2016년 5월까지 전국 GAP 농가가 생산한 GAP 농산물 3313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GAP 농산물 3313건 중 미등록농약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73건(2.20%)이다. 이는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15건, 0.45%)보다 ▲거의 5배나 많은 수치다. 일반농산물 적합 건수는 3년사이 매년 감소했지만 미등록농약으로 인한 부적합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가장 많이 검출된 농약 성분은 프로사이미돈>사이퍼메트린·카벤다짐 순서였다. 최근 계란살충제 사건에서 문제된 비펜트린이 GAP 인증 쌀에서 검출되기도 했다.

● 비의도적 농약검출 등 친환경 인증취소, 농민 불만 크다

○비의도적 농약검출사례 크게 늘어...불만 고조.....친환경 인증제도개편 필요

▲친환경인증 취소에 대한 친환경농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현재 경찰 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정부도 친환경인증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친환경농업 존립 자체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친환경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민간인증기관들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 취소 건이 크게 늘었다. 충북의 경우 올해 인증 취소된 건수가 84건에 이른다.

▲문제는 친환경인증 취소 농가 중 본인의 자발적 의도가 아닌 인근 논에서 농약이 날아오거나 항공방제, 인근 관행농가 과수원에서 농약이 비산되거나 계분퇴비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등 비의도적 검출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이런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농민들의 불만은 클 수 밖에 없다.

▲친환경인증을 둘러싼 구조적 부패비리는 반드시 척결돼야 하지만 여론에 편승한 보여주기 식, 실적 위주의 과잉단속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묵묵히 종사해온 친환경농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선 결코 안 된다. 친환경인증이 부당하게 취소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제도 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농어민신문 10.13 및 농정신문 10.15자)

◎ 친환경농업계, 정부 정책 근본 개혁 위한 대책위 세운다

○ 정부, 무항생제 인증제 폐지·친환경인증제 제재 강화 고민

▲친환경농업 정책의 근본 개혁을 위해 친환경농업계가 대책위원회를 결성 향후 대책위를 통해 정부에 친환경농업 정책의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다방면으로 벌일 계획이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친농연)와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살림),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은 지난 17일 서울시 서초구 aT센터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친환경농업이 소외당하는 상황을 목과할 수 없단 인식하에, 본격적으로 범(凡)친환경농업계가 정책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선 모임이다.

문재인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해 △환경친화적 농업 전환 및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관련 비전 제시 부재 △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지지에 대한 정책 제시 부재 △GMO 상용화 중단, GMO 완전표시제 학교급식에서의 GMO 퇴출에 대한 정책 부재 △친환경 무상급식, 공공급식에 대한 대책 부재 상황이라 평가했다.

▲최근 현행 인증제의 안전성 검사 및 규제조치 강화 내용은 △모든 농산물 생산과정조사의 100% 불고지 조사원칙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농약·동물용 의약품이 생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가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인증 취소 처분 3회 이상시 친환경인증에서 영구 퇴출)' 도입 △중대 부정행위자의 과징금 부여 및 재정사업 참여 제한 등 현행 친환경인증제의 법적 제재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친환경 축산제도개선은, 현행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오는 2020년부터 연차별로 폐지하고, 민간자율 인증제로 전환하고 2020년 산란계 무항생제 인증 폐지 뒤 2021년 가금 전체→ 2022년 한·육우 돼지 등에 대한 인증제를 순차적 폐지에 대해 "농민을 사실상 예비 범법자로 모는 수준의 방안" 비판하고, 경축순환 농업체계가 붕괴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 강원도, 광역단위 최초로 무상급식 고교단위 확대

○ 안정적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 확보도 모색해야

▲강원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최명희 강원도시

장군수협의회장(강릉시장),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 등은 지난 10일 강원도청에서 만나,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무상급식 확대로 지역 친환경농민들의 농산물 유통판로 개척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전남 나주시 산포면에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친환경농산물 최대 생산지인 전남에 처음으로 대규모 물류기반이 구축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전남 나주시 산포면에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을 마치고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된 물류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부지 2만9987㎡, 연면적 1만3644㎡규모로 5년에 걸쳐 총 278억원이 투자됐다. 주요 시설은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선별포장 등이다.

◎ 농진청, 2016년산 주요 56작목에 대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결과

◎같은 작물이라도 소득상위 20%농가와 하위 20%농가간 적게는 3.9배에서 많게는 41배까지 단위면적당 소득격차=10a당 시설축성오이 1536, 부추 389만원 최고

▲농촌진흥청의 16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10a(1000㎡) 기준 소득은 노지작목 중 부추가 389만2300원, 시설은 오이 축성재배가 153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같은 작물이라도 소득상위 20%농가와 하위 20%농가 간에는 적게는 3.9배에서 많게는 41.2배까지 단위면적당 소득격차가 컸다.

작목별 10a당 소득 순위 변동(시설)

기준 : 1000원/10a

순위	2014	2015	2016
1	파프리카 15,883	오이(축) 15,101	오이(축) 15,360
2	오이(축) 13,980	파프리카 14,139	시설감귤 15,196
3	시설장미 12,862	토마토(축) 12,997	토마토(축) 13,032
4	시설감귤 12,788	시설감귤 12,773	파프리카 12,865
5	토마토(축) 12,425	시설가지 12,376	달기(반) 11,986

작목별 10a당 소득 순위 변동(노지)

기준 : 1000원/10a

순위	2014	2015	2016
1	생강 3,919	포도 3,590	부추 3,892
2	부추 3,891	사과 3,584	쪽파 3,757
3	포도 3,659	오미자 3,412	참다래 3,540
4	녹차 3,505	복숭아 3,399	포도 3,308
5	사과 3,417	생강 3,301	복숭아 3,127

상위소득 20%와 하위소득 20%농가의 상·하위 격차

단위 : 원, 배



● **외래병해충 유입, 검사·예찰 강화해야**

○ 외래병해충은 지난 7년 동안 7만 여건, 병해충 방제비는 올해 62억3000만원으로 3배나 늘고, 손실보상금도 2013년 9억원에서 지난해 42억원으로 증가

▲ 농촌진흥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래병해충은 지난 7년 동안 7만 여건에 달하고 피해면적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병해충은 배추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탕무씨스트선충병으로 6년 동안 255ha에 전체 47% 수준이다. 다음은 과수화상병으로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 등의 사과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배추 병해충인 사탕무황화바이러스 등 2000년 이후 34종이나 유입됐다.

▲ 문제는 이들 해외병해충을 관리할 검역인력이나 전문가양성이 부족한데다 진단장비 등의 예산이 중단돼 손실보상금만 증가하는데 있다. 병해충 방제비는 2013년 23억9200만원에서 올해 62억3000만원으로 3배나 늘었다. 손실보상금도 2013년 9억원에서 지난해 42억원으로 증가했다. 해외병해충은 국내 생태계 교란 측면에서도 철저한 검사와 예방이 중요하다.

● **수입과일 10년간 2배 급증... 우리과일 경쟁력강화 시급**



○ 최근 10년간 수입과일이 2배 증가하는 동안 국내 과일 생산은 감소

▲ 농식품부가 위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일수입량은 2007년 55만2,771톤에서 2016년 76만463톤으로 10년간 20만7,692톤이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2007년 5억3,721만 달러에서 2016년 11억5,813만 달러 늘어난 것이다. 이는 약 7,047억4,420만원에 달한다. 10년간 과일수입량은 37.6% 증가했고, 과일수입액은 115.6%나 상승했다.

▲ 반면 같은 기간동안 우리나라 과수 생산량은 2007년 275만2,006톤에서 2016년 265만2,449톤으로 9만9,557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우리 과일의 경쟁력을 높이고 과일 소비경향을 반영한 품종갱신 등을 통해 수출 및 소비촉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농진청,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보급 강화 ... 김영록장관에게 첫 업무보고**



"4차 산업혁명 대응 ICT, BT 등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우리 농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미래성장산업과 수출산업으로 연계

▲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이 19일 국제회의장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에게 첫 업무보고자리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겠으며,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응 ICT, BT 등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성장산업과 수출산업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농진청과 현장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 조정제 지원, 시구제역 등 전염성 가축질병 예방을 비롯해 현안 대응 지원은 물론 농업기술이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가계빚 주범 집 투기 막는다… “신DTI 내년 1월 시행”**

‘가계부채 종합대책’ 정부, 1400조 달하는 가계빚 문제 해결 팔걸어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액 반영하는 ‘신DTI’ 도입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까지 부채로 취급하는 ‘DSR’ 내년 하반기부터 활용 취약 대출자 맞춤형 지원 서민정책자금 공급규모 확대 연체금리 산정체계 전면개편 부채의 질적 개선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 생계비 절감 대책도 마련했다.

◎ **국제농업박람회 26일 전남 나주시 개막**



전시관별 다양한 볼거리와 음식문화 체험 기회가 제공
최첨단 농기계 자재 전시관, 각종 심포지엄, 친환경 디자인전

- ▶미래농업의 비전을 제시할 2017 국제농업박람회가 오는 26일부터 11일간 전남 나주시 농업기술원에서 열린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박람회는 관람객 45만명을 목표로 혁신기술마당, 홍보판매마당 등 5개 마당, 14개 전시관이 운영함.
- ▶시·군 우수 농특산물 판매 장터, 드론·전기차 등 미래농업을 선도할 최첨단 농기계 전시관도 마련된다. 31개국, 394개 기관·기업 등은 국내 우수 농산물, 농식품 등 1천여억원 수출 구매 약정을 체결할 예정. 세계 곤충산업 현황 등 학술행사도 진행된다.

◎ **그 외 농산업 행사소식**

2017 강소농대전(10.25~28), 제12회 대전국제농업기술전(TAMAS· 11/1~3)
2017 김제농업기계박람회(11/8~10), 첨단농축산기자재박람회(11/15~17)

- ◆ 2017 강소농대전=농촌진흥청이 준비한 ‘2017 강소농대전’이 25~28일 나흘간 서울 코엑스 전시관 A홀에서 개최된다. ‘함께하는 강소농! 신나는 자율모임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강소농대전에는 강소농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이 전시·판매된다.
- ◆제12회 대전국제농업기술전(TAMAS)=대전무역전시관에서는 11월1~3일 ‘TAMAS 2017’이 펼쳐진다. 격년제로 열리는 TAMAS 전시회는 농기계와 축산·과수기계, 온실·관수자재, 종자·종묘, 시설원예뿐 아니라 첨단농업기술 업체까지 184개사가 참가한다. 또 33명의 해외바이어와 1대1 매칭 수출상담도 진행한다.
- ◆ 2017 김제농업기계박람회=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전북도·김제시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11월8~10일 김제 벽골제에서 열린다. 올해 190개사가 380개 기

종의 농기계와 농자재를 전시할 예정이다.

◆ 첨단농축산기자재박람회=농업·축산분야 융복합 과학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첨단 농축산기자재박람회(KIAFE 2017)'가 11월15~17일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 된다.
▲첨단농기자재관 ▲첨단축산기자재관 ▲미래농업관 ▲6차산업·도시농업관 4개 관으로 구성된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화공분회가 추천하는 중국의 비료·농기자재 관련 기업도 참여한다. 한친농도 4개부스를 제공받아 참석한다.

[해외 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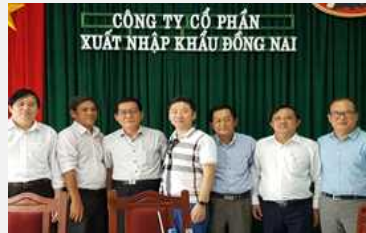
◎한친농, 중국사천성 생태농업기지 조성사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

▶成都 등 사천성에 100만무 현대화 생태농업기지 건설에 한국형 친환경생태농법 /친환경농자재를 투입 조성기로 지난 8월 중국국무원과 MOU 체결한 바 있다. 이어 10월초 중국측의 우선 시행요청에 의거 고추(당조 등)와 배추(고베타카로틴 등) 1단계로 올 설치가 가능한 TEST-BED 운용계획을 수립 단계별(2단계 4작목, 3단계 10작목)로 친환경농자재를 시험후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친농, 베트남 바나나집단농장 및 과기부기술이전센터와 MOU

▶한친농은 베트남농업협회 및 과학기술부기술이전센터 관계관을 초청 한·베 친환경자재등 기술교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월초 한친농은 베트남 바나나집단농장(340ha규모) 및 베트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커피(유통물량의 70%를 차지)를 생산유통하는 동나이농협유통 등을 방문 MOU를 체결하고 향후 친환경농자재 공급 합작사업을 추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중국 '식파라치' 활개...농식품 수출기업 주의해야

사드갈등 이후 농식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절차가 더 엄격해진 가운데 '식파라치' 까지 기승을 부려 한국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T에 따르면 중국 식파라치에게 고소를 당하면 통상 2년에 걸친 소송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여러 식파라치가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기도 해 표적이 된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기업들이 수출 전 제품의 원료인증 등을 확인하고 중국 규정에 맞는지 aT 현지화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심의를 받을 것이 필요하다